

글로벌 인권 문제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이후의 과제

신기영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준교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한 뒤 국내에서는 비판여론이 강하다.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간 타협에 의한 합의는 진정한 해결에 이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 2016년 5월 현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 설립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운용을 피해자 중심 시각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1990년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전시하 성폭력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지속성 있는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중대 인권 문제를 국가 간 타협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에 따른 해결을 위해서 유엔 인권기구들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아왔는지를 재검토한다. 한·일 간의 합의는 정부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것이기는 하나, 국제무대나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승인이 없으면 갈등은 지속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비정부단체 로비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인권 규범의 정당성을 활용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이 요구된다.

*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회(2016.3.24)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외교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두와 한일합의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
3. 전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
4.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
5. 한일합의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과 일본의 반응
6. 정책 제언

1. 들어가는 말: 외교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두와 한일합의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한·일 간의 첨예한 외교 문제로 등장하여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에는 한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되었음
 - 한·일 양국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장급 협의를 12차례 진행해 왔음
 - 합의 이전에는 2012년 3월 ‘사사예안’이 제시된 적이 있으나, 각론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지난 2015년 11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합의함에 따라 협의를 계속하여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양국 합의의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두 정부 간 문제의 “해결”이 시도되었음
- 그러나 합의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은 여전히 한·일 정부 간의 양자합의라는 틀만으로는 이 문제가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보수정부 집권기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외교·정치적 ‘걸림돌’로 다루어져 왔고 한일합의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여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수단적인 의미가 강함
 - 반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공통된 과거에 대한 기억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과 미래 전망이 부재함
 - 또한,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아시아 여성 개인들이라는 한국을 넘어선 아시아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음
 - 따라서 합의 이후에 한·일 지원자 단체 및 글로벌 인권기구의 평가는 해결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임
- 이 글은 국가 간의 양자적 해결 틀이 타협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에 반해, 국가와 개인(피해자)들이 주체가 되고 글로벌 인권 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해결 방식이 더욱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근접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중대 인권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 선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 있어야만 화해와 해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발전한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의

확립 과정에서 중대한 여성인권 문제로 글로벌 이슈화되었다는 맥락이 존재함

- 유엔의 인권기구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복합적 성격

-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뿐 아니라 양국의 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층적 구조 내에서 이해해야 함. 시민사회-국가-아시아-글로벌의 네 수준이 복합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위안부 문제가 형성되어 왔음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한·일 간은 물론, 일본의 국내에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 일본에서는 여론을 주도하는 정부, 진보적 시민단체, 우익적 시민단체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진보적 시민단체가 여론을 주도하고 그 뒤에 전략이 불확실한 정부가 존재했음
 -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을 위해 한·일의 위안부 문제 지원단체들은 아시아 및 글로벌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글로벌 인권 문제로 이슈화하였음
- 한일합의 직전까지 일본 정부는 1) 국내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시민단체와 여론, 2) 국제적으로는 한국 정부, 그리고 3) 글로벌 수준에서는 국제 인권 규범과 부딪히는 다층적인 갈등관계 속에 놓여 있었음
 - 한일합의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갈등 수준인 한일관계를 해결하게 된 것임
 - 하지만, 한·일 정부 간의 합의도 양국의 시민사회와 글로벌 수준에서의 승인(承認)을 얻지 못하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임
- 위안부 문제가 갖는 이와 같은 다층적인 구조, 즉, 시민사회·국가·아시아·글로벌의 네 수준이 어떻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인식하고, 한·일 간 양자합의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과 시민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글로벌 여성인권 문제로서 제기되고 자리매김되어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왜 위안부 문제가 한일합의로 종결되기 어려운 현재진행형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됨

*시민사회-국가-
아시아-글로벌의
네 수준이 복합적으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위안부 문제가
형성되어 왔음*

한국 여성들의
문제 제기에
일본 정부가
정부 관여를
부인하자,
1992년경부터
지원단체들이
유엔 인권기구에
문제를 제기

3. 전시 성폭력에 관한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

- 위안부 문제의 현재적 의미와 국제적 성격
 -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의 초국가적 여성인권 운동이면서, 1990년대 이후 발전한 전시(戰時)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 속에 글로벌 이슈가 되었음
 - 1991년 김학순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곧장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게 됨.³⁾ 1990년, 한국 여성들의 문제 제기에 일본 정부가 정부 관여를 부인하자, 1992년경부터 지원단체들이 유엔 인권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함
 - 한국의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아시아의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시민단체들이 조직되는 형태로 아시아 공통의 인권 문제로 피해자에서 아시아 시민으로 수평확대되었음
 - 여성운동사의 흐름 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떠오른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퇴치에 대한 전사(前史)가 있음
- 1990년대의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
 - 1990년대의 탈냉전기에 발생한 보스니아 전쟁 및 르완다 내전 등에서 집단적 강간 및 인종청소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크게 주목받게 되어, 특히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은 전쟁을 위한 계획된 수단임이 인식되기에 이룸
 - 위안부 피해자들도 1992년 비엔나 인권회의 및 국제인권기구에서 직접 증언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전시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 규범의 발전에 기여함
 - 1998년에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어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전시 성폭력이 포함됨
-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유엔 인권기구들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음³⁾
 - 1996년에 위안부 문제에 특화한 구마라스와미 보고서,⁴⁾ 1998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맥두걸 보고서⁵⁾가 연이어 채택되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안부는 성노예(sex slave)로, 위안소는 강간소(rape center)로 개념화됨
- 아시아 피해자단체들의 연대활동 및 글로벌 여성연대의 성과

- 한국과 일본 및 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부 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하였음. 199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연대회의’는 이 초국가적 아시아 여성연대의 활동을 잘 보여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러한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해외의 한인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글로벌 이슈화하였음
 - 일본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수준의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정열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하였음. 일본에서 진행된 11건의 소송 사건을 지원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로 결성된 소송 지원 활동이 대표적임
 - 2000년 동경에서 개최된 ‘2000년 동경 여성법정’은 글로벌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입법운동이 있었으나, 1, 2차 아베 정권과 같이 역사수정주의가 매우 강력하게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시민운동도 이에 맞서 보다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임

4. 유엔 인권기구의 입장

-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권고
 - 유엔 인권기구의 하나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 국제인권기구 중에 가장 먼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권고한 인권 위원회임
 - 일본은 1985년에 여성차별철폐조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가입함으로써 체약국이 되었고 체약국의 의무인 조약 이행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과 심사를 받아 왔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 1월의 2, 3차 통합심사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 2~3월에 있었던 7, 8차 통합심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
- 1994년 1월에 행해진 일본의 조약 실시 상황에 대한 2, 3차 통합심사
 - 생존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생존자 개인에게 포괄적인 보상(overall compensation)을 실시할 것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여성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음
 - 일본 정부는 제출한 실행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91년에 정부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1994년,
모든 생존자 개인에게
포괄적인 보상을
실시할 것과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여성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

민간재단인**아시아여성기금을****이러한 중대한****인권침해에 대한****충분한 보상 조치라고****보지 않았음**

자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993년에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고 기술함. 또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안타까운 마음(remorse)을 표현할 최선의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함

- 이때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소분류 내에서 다른 폭력 관련 사안들과 함께 언급되는 정도였음
 - 또한, 심사 내용의 요약(summary report, 1994.3)에서는 “강제연행된 위안부(forcibly recruited comfort wome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1998, 2002년에 제출된 4, 5차 일본 정부의 정기 조약 실행보고서
- 4차 정기 실행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4, 5차 실행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1. 피해자 개인에게 총리 편지 전달
2. 국민 모금에 의한 속죄금 전달
3. 정부 지출에 의한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
4. 인도네시아에서의 프로젝트(5차 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의 사업 포함)
5. 여성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관련한 여성 기금의 활동 지원
6.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단체 및 시민 활동 지원
7. 위안부 문제의 역사 교과서에 기재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이행(fulfilling moral responsibility)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이후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성실하게 대처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함
- 2003년에 실시된 4, 5차 실행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통합심사
- 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아시아여성기금은 보상으로서 불충분하며 지속성 있는 해결책(a lasting solution for the matter of “wartime comfort women”)을 제시하기를 권고하였음
 - 이미 1996년의 유엔 인권 문제 특별보고관 구마라스와미 보고서 및 1998년의 맥두걸 보고서, 그리고 이들의 2차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 이어서, 1990년대 말에는 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전시 성폭력으로 성노예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음
 - 따라서, 유엔 인권기구들은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조치라고 보지 않았음

○ 2009년의 6차 정기심사

- 일본 국내에서 우익세력에 의한 위안부 문제 부인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축소 및 삭제되기 시작함
- 우익 정치가들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발언들이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미국의 하원 결의안 통과를 비롯해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짐
-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 카테고리라 별개의 독립된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범죄(crime)로 지칭하고, 권고 내용도 매우 구체화되기 시작함⁶⁾

37. The Committee notes that some steps were taken by the State party to address the situation of “comfort women” but regrets the State party’s failure to find a lasting solution for the situation of “comfort women” victimiz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expresses concern at the deletion of references to this issue in school textbooks.

3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urgently endeavour to find a lasting solution for the situation of “comfort women” which would include the compensation of victims, the prosecution of perpetrators and the education of the public about these crimes.**⁷⁾

- 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유엔 인권기구의 인식과는 점차 더 동떨어진 것이 되어 갔음
 - 2014년 9월 25일에 일본 정부가 제출한 7, 8차 통합 실행보고서에서도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 내용만을 반복하고 있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외의 다른 유엔 인권기구들 역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하기 시작함
- 이러한 사실들에서 글로벌 수준에서는 이미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답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음
- 이에 따라 일본의 우익세력은 가능한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과 위안부 문제를 분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글로벌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됨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
카테고리와 별개의
독립된 주제로
다루기 시작...
일본의 우익세력은
글로벌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됨**

한일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해결했다는

인식 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시사...

8개 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그림자 보고서 제출

5. 한일합의 이후 유엔 인권기구들과 일본의 반응

- 2016년 2~3월에 진행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7, 8차 통합심사
 - 한일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인권기구의 심사라는 측면에서 중요함. 한일합의를 일정 정도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일본 정부는 한일합의문을 추가로 제출하고 이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resolved finally and irreversibly)되었음을 주장하고, 심사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에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반론하였음
 - 한일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해결했다는 인식 위에 앞으로의 역량은 글로벌 수준에서 확대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엔 인권기구 심사에 우익계 시민단체 대거 등장
 -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심사에서는 지금보다는 약 2배 이상 많은 NGO들이 그림자 리포트를 제출하였음
 - 이 중 8개 단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또 다른 8개 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그림자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비정부단체의 그림자 리포트가 글로벌 여론 형성과 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을 인식하고, 우익단체들이 유엔 무대에 진출한 것으로 보임
 -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을 자제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국제무대에서의 비정부단체 간의 로비활동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6. 정책 제언

- 한국의 피해자단체는 합의 내용을 이 문제의 해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 피해자단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
- 한일합의의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므로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는 피해국 정부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수준 및 아시아, 글로벌 수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각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적으로

- 위안부 문제 지원단체와 비판적 여론에의 대처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역사수정주의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면, 피해국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제한적임
-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이유는 기금의 출처와 방식에 대해 피해자가 반발한 점과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태도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아시아여성기금보다 무엇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적 합의 없는 재단 설립을 서둘러서는 안 됨. 새로 설립될 재단의 목적과 운용에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적인 시각(victim-centered approach)’을 택하는 것이 필요함. 그것이 어렵다면 재단 설립을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됨
- 사업 내용에는 최소한도 지속적인 사실 발굴, 자료 정리 및 공개, 학술 연구, 기억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일본과의 양자관계

- 현재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2014년부터 역사수정주의를 공식적인 당의 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임. 1990년대 말에 위안부 문제가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지도하에 거의 모든 정부 인증 교과서에서 삭제되었음
-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 당분간 갈등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큼. 재단 설립 방향에 대해서도 한·일 정부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정부와 같이 역사 문제를 한일관계의 볼모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음.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이지만, 글로벌 인권 사안이기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양자간 협상에 의존하기보다 일본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권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일본 내의 다양한 채널과의 교류를 통해 우익적 사고의 영향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의 피해국과의 관계

- 일본을 포함해 전체 아시아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사업이나 조사, 기념 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미 아시아연대회의와 같은 시민연대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틀을 확대하여 기림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

새로 설립될 재단의 목적과 운용에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적인 시각’을 택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현 정부와 같이 역사 문제를 한일관계의 볼모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음

-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수준

- 2014년부터 자민당은 역사수정주의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고 해외로 “역사전쟁”을 확대시켜 왔음.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역사수정주의를 채택한 연구서를 해외의 연구자들에게 무단 배포하거나 해외에서의 소녀상 건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일본의 침략역사 부인, 여성인권 부인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실 규명과 연구 지원, 그리고 유엔 등에서의 정확한 지식의 보급 등에 힘쓰는 것이 필요함

주석

- 1) 2013년 3월 당시 일본의 노다 정부의 외무차관 사사에 겐이치로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합의안이다.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주한 일본 대사의 피해자 방문 사죄 표명과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의 협상에서 합의를 향한 하나의 모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유엔에 한국 측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던 일본인 변호사에 의하면 일본 관련 다른 인권 문제들은 그만한 주목을 받은 예가 없을 만큼 위안부 문제는 UN 인권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커다란 반응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戸塚悦郎, 『(普及版)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へ向けて』.
- 3) 일본은 2차례에 걸친 정부 조사를 하였고, 1993년 고노담화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발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많은 자료들이 새로 제시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새로운 조사는 없었다.
- 4) E/CN.4/1996/53/Add.1
- 5) E/CN.4/Sub.2/1998/13
- 6) 아래 38항 밑줄 부분. 밑줄은 저자가 표시.
- 7) CEDAW/C/JPN/CO/6(2009/08/07), p.8.

참고문헌

- 신기영. 2016.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일본비평』 15호(8월 출간 예정).
- 정진성. 2004.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찬위원회. 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 Chappell, Louise. 2015. *The Politics of Gender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egacies and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Heisoo. 2011. “Seeking Justice, Honor and Dignity: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Hakan Seckinelgin, Billy Wong (eds.). *Global Civil Society 2011: Globality and the Absence of Justice*. Basingstroke: Palgrave Macmillan.
- 戸塚悦郎. 2008. 『(普及版) 日本が知らない戦争責任—日本軍「慰安婦」問題の真の解決へ向けて』. 東京: 現代人文社.
- 아시아여성기금 홈페이지(<http://www.awf.or.jp>).
- 유엔인권기구 홈페이지(<http://www.ohchr.org>).

❖ 저자 약력

■ 신기영

現 일본 국립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준교수, 동 대학 대학원 및 젠더연구소 준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